

환자 사망 부른 '판독 하청' ...안전장치 마련 시급하다

광주보훈병원, 1차 의원 판독 착오로 장 천공 조기 발견 못해
종합병원 책임은 30% 그쳐 ...재검토·관리감독 강화 등 필요

광주·전남 대형 병원들이 환자도 모르게 MRI, CT 등 영상 판독을 '외주' 맡기고 있는 점<광주일보 2025년 11월 3일 7면>과 관련, 오진 등을 막기 위한 환자 안전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광주보훈병원에서 영상 판독 외주를 맡긴 의원이 중요 질환에 대한 진단을 누락해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해 의원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다.

이원화된 진단 구조로 오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영상 판독 재검토, 관리감독 강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보훈병원을 운영 중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광주시 남구 A의원 의사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광주보훈병원 측은 지난 2023년 장 천공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환자 B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영상검사 원격 외주판독을 맡은 A의원이 진단을 잘못 내린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 광주보훈병원이 유족에게 합의금 3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해당 의원 측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B씨는 지난 2023년 5월 13일 전신 위약감 등을 이유로 광주보훈병원에 내원, 코로나19 양성 및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가 장 천공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숨졌다.

B씨는 같은 해 7월 7일 병원에서 복부와 폐에 대한 CT 검사를 받았는데, 이 때 병원 측은 영상검사 원격 외주판독 용역계약을 맺은 A의원에 영상 검사를 의뢰했다. A의원은 폐렴 소견만을 판독해 회

신했으며, 복부 CT 검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견을 내지 않았다.

이후 B씨는 일주일도 안 돼 혈압 저하, 호흡곤란 등으로 전남대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복부 CT 검사를 다시 해 본 결과 뒤늦게 장 천공이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B씨 유족으로부터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았고, "의료진의 과실과 B씨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합의금 3500만원을 줄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광주보훈병원과 A의원 모두 장 천공을 진단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계울리 해 책임 소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검사 영상에서 장 천공을 시시하는 증상이 두렷하게 확인되는데도, A의원이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계울리해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시에 광주보훈병원 측도 B씨의 복부팽만 내지 혈변 등 증상으로 독자적으로 장 천공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진단을 하지 않고, 흉부 촬영 영상 판독을 의뢰한 점 등에서 책임 소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광주보훈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설정, 의원 측에 70% 책임이 있다고 봤다. 용역 계약서상 판독 오류 책임이 A의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전남의 한 군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C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주적 검사를 받아오다, 이미 전년도부터 갑상선에 암이 발생해 입파선까지 전이가 되고 있던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알고 보니 주적 검사를 위해 촬영한 영상들은 해당 병원 상임전문의가 판독하지 않고, 동네 의원급 1차 병원 의사들이 '대리 판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한다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원격 영상 판독 시스템이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도 종합병원 측 책임은 30%에 그쳤다는 점에서 종합병원이 오진 책임을 줄이기 위해 1~2차 병원에 진단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하청' 형태로 변질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유사한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원정' 격인 종합병원 측의 영상 판독·진료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강화하고, 외주 판독한 영상을 재검토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외주 판독은 절차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탓에 종합병원 대부분이 외주 판독을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주 영상판독 업체를 입찰할 때 복부, 두부, 흉부 등 전문 분야에 맞는 의사가 있는지 추가 확인토록 하고 판독 사후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을 체계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함평·목포, 교통문화·안전도 '전국 최하위'

운전·보행행태 등 낮은 점수

강진군의 교통 문화 및 안전도가 전국 82개 군 가운데 최하위인 80등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문화지수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문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로, 지자체별 순위에 따라 A(상위 10%)~E(하위 10%)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는 운전행태(제한속도·신호·음주운전·금지 준수율 등), 보행행태(무단횡단·금지·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등), 교통안전(지자체 교통안전 행정 노력도, 교통사고 사상자 수 등) 등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 결과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강진군, 함평군, 해남군이 E등급을 받았다.

전남지역 인구 30만 미만 시·군에서는 목포시가

75.07점으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목포시는 특히 지자체의 교통안전 행정 노력도 등을 평가하는 교통안전(9.41점·E)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군 지역에서는 강진군이 66.48점(E)을 받았으

며, 전국 82개 군 가운데 80위에 머물렀다. 전년도 44위(79.11점·C)에서 36계단 떨어진 것이다.

강진군은 운전행태 42.36점(D), 교통안전 8.05점(E), 보행행태 16.06점(D) 등 모든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지역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 등 항목에서 0점을 받는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73.29점(E)으로 74위, 함평군은 72.78점(E)으로 76위 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올해 84.48점을 받아 종합 C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4년 조사 결과(81.39점)보다 3.09점 상승한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3위에 올랐다.

광주시는 운전행태 48.30점(55점 만점·B등급), 교통안전 18.91점(25점 만점·C등급), 보행행태 17.27점(20점 만점·A등급)을 받았다.

지자체별 조사에서는 광주시 서구가 80.80점(C)을 받아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36위에 머물며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북구는 86.36점으로 전국 6위(A)에 올랐고, 남구 85.01점(9위·B), 광산구 84.42점(14위·B), 동구 82.54점(15위·B) 순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운전행태 48.07점(B), 교통안전 15.3점(D), 보행행태 17.43점(C)으로, 교통안전과 보행 행태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통안전 세부 항목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 정도 4.40점(14점 만점·E), 인구 및 도로연장 대비 보행자 사상자 수 3.45점(5점 만점·C), 인구 및 도로연장 대비 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자 수 0.53점(5점 만점·E), 사업용 자동차 대수 및 도로연장 대비 교통사고 사상자 수 0.43점(4점 만점·E) 등을 기록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 평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남지역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162곳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전남도는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민간 전문가, 시설관리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귀성객과 도민이 밀집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물 균열·누수 등 결합 ▲소방·전기·가스시설 관리·운영 실태 ▲비상구·복도·계단·승강기 등 피난통로 확보 여부 등의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8cm 눈

2일까지 전남동부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낮에는 영상으로 기온이 오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일 새벽(0~3시)부터 아침(6~9시) 사이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동부내륙 지역 3~8cm, 광주와 그밖의 전남 지역 1~5cm이다.

특히 2일 새벽(3~6시)부터 아침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 시간당 1~3cm, 전남동부내륙 지역에 5cm 안

팎의 강한 눈이 집중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곡성과 구례 지역에는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졌다.

다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눈이 내린 2일 낮부터 최고기온 2~6도에 이르는 등 영상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에도 낮 최고기온 4~10도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면서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 남구 방림2동 시니어센터 전경.

광주 남구 방림2동 도시재생 어쩌나

17억 들인 시니어창업센터, 개관 1년 만에 문 닫아

광주시 남구가 17억원을 들여 조성한 '시니어 창업센터'가 개관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센터 역할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9일을 끝으로 광주시 남구 방림2동 '시니어창업센터' 운영이 중단됐다.

위탁 운영을 맡았던 기관이 수의 구조 한계를 이유로 2년의 계약기간을 벗어지지 않고 1년 만에 철수하기로 했다는 것이 남구 설명이다.

남구는 지난해 1월 17억원을 투입해 빙동을 철거하고 연면적 264㎡, 지상 2층 규모의 시니어창업센터를 새로 지어 운영에 들어갔다. 공유주방과 웨빙 카페(1층),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공간(2층)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었다.

하지만 센터 운영사측은 1년도 안 돼 자금난을 호소하며 운영을 포기했다. 운영사측은 월 99만 1000원의 임대료를 구매 납부해왔는데, 유일한 수익사업인 1층 카페의 월 매출이 평균 20~30만 원에 그쳐 심각한 적자를 봤다는 것이다. 인근에 들어선 신규 카페 등도 센터 내 카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 운영업체가 적자만 보고 운영을 포기한 상황이라 차기 운영자로 나설 업체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남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남구는 향후 법인·단체·민간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운영 모델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

제54회 강진 청자축제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